

제426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6월27일(금)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09시31분 개의)

○소위원장 정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일정 말씀드리면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뒤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우주항공청 예산안 그런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은 잘 아시는 대로 대체토론,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정부 측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 논의를 거쳐 사안별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각 부처별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μSv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다. 우주항공청

○소위원장 정동영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1차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이창윤 1차관님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인기초연구에서 40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에 필요한 정책연구사업 1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장님, 개인기초연구사업 400억 증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생태계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용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기초연구의 추경 요건에 대한 부합성이나 아니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초연구 R&D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HBM 기초연구센터 설립 정책연구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다만 연말까지 추경예산의 소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0억이 조금 과대해 보일 수가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를 한 4억 규모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지금 1차관 소관 이 자료가 어제 저희 전체회의 할 때는 몰랐는데 언제 올라온 거예요? 충분히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형두 위원 이게 전부 우리 위원님들 증액안인데……

○이훈기 위원 그렇지요.

이걸 검토하고 그럴 만한……

○소위원장 정동영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아마 저도 비슷한 말씀이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경으로 원래 몇 개 사업 올리셨었지요? 어느 분께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저희 정부 제출 사업은 11개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지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어제 과방위 위원장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어제 오후 3시에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과 함께 11개 사업 꼼꼼히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어제 오후 7시 반부터 8시 사이에 예결심사소위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 9시 넘어갈 거라고 생각됐지

만 그래도 빨리 와서 의원실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갑자기 방통위랄지 우주청 소관 제외하고도 과기정통부 사업 36개가 저녁에 추가로 들어가서 왔어요.

저는 퍼지컬 AI처럼 꼭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 조율 때문에 빠졌던 사업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9시 반에 할 소위 심사인데 36개 사업이 갑자기 왜 등장하게 됐는지 상황 파악을 하다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각 의원실에서 부처에 시급성 질의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처에서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한 자료 일부를 보내서 이리됐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올라온 자료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넣을 것을 갑자기 어젯밤에 넣었다는 소리예요. 그것 하나하나 보느라고 저는 밤샘을 했다고요.

1차 추경 때 어땠어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안건이 너무 많아서 예결위로 그대로 보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방위 예결소위는 왜 있어요, 심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은 우리 과방위 예결소위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하실 때 올라온 안건 중에서 추경하고 본예산 갈라서 지금 심사하는 것마다 언급해 주시고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습니다. 국회에 오셔서까지 시정연설 하신 것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절실함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추경 도대체 언제 하나 찾아봤어요. 헌법 제56조, 국가재정법 7조, 89조, 90조 다시 찾아보세요. 추경에 해당되는 것인지, 반드시 추경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입각해서 오늘 소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알려 주셔야 됩니다. 제안을 하신 쪽에서 알려 주셔야 소위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판단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 이훈기 위원님 앉자마자 ‘이게 왜 올라왔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저희가 맥스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이걸 다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어요, 혈세인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안을 해 주시고 발표하시는 두 쪽에서 ‘이게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예산으로 넘겨도 되는 것입니다’라고 적어도 그 두 가지는 갈라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설명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임명현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정부안에 담긴 것 외에 의원님들은 자율적으로 증액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추경안으로 올라가는 게 맞냐 그르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목적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이걸 맞다 아니다 해서 증액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미리 저희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면 원래 추경안으로 올리신 건지 아닌지를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명현 여기 증액 올라온 것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정안이라고 표에 돼 있는 게 추경이 아닌데 추가로 한 겁니다.

○이해민 위원 다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임명현 2번 10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 과기부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논의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집행가능성을 저희들이 고려했을 때 10억이 조금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미래인재정책국.

○전문위원 임명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관련해서 382억 67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를 최저생계비, 물가상승률 연계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정부 의견 올리겠습니다.

스타이펀드는 학생 연구원들의 안정적인 학업과 연구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액을 저희들도 수용을 하는데 어저께도 저희 장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60여 개 대학이 스타이펀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의원실과도 그렇게 협의한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참여가 가능한 대학들을 보니 상반기에 29개 대학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서 56억 정도의 배정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10개 대학에 대해서 상반기 배정 잔액 56억을 가지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 말씀하신 382억은 너무 과도한 증액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가능한 규모를 한 72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박충권 위원님이 제기하셨는데 정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충권 위원 차관님, 애초에 과기부가 작년에 예산을 작성할 때 382억이라는 예산의 증액을 요청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학교들이 예산을 타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4년 5월 말에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에 과기부랑도 협의를 많이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작년 연내 가능한 한 빠른 통과를 위해서 서로가 노력한 것 아닙니까,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준비를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 왔고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과기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들에 홍보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스템도 얼마나 복잡하길래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 학교들이 이렇게 6개월이 넘도록 타 가지 못할 정도로 돼 있는 겁니까? 연구생활장려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할 학교들, 싫어할 학생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입법

도 하고 저희들이 재정 사업도 만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대학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전체 국가 R&D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해야 되고 부족한 학생들이 얼마큼이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식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되다 보니 사실 그동안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했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에서는 사실은 미흡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말씀을 송구하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스타이펜드 참여 대학을 늘리겠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연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좀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파악한 것은 한 10여 개 정도 대학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예상하셨던 60개 대학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내년에는 아무래도 더, 60개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반기 10개까지 하면 39개 대학이 참여할 텐데 그 부분들을 더 늘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진행이 될 겁니다, 위원님.

○박충권 위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예산을 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들도 마찬가지로인데 국가에서 대학원생들 연구생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못 받아 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정동영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다음 넘어갈까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음, 소위 자료 5쪽입니다.

1번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연구지원에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에서 63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3번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사업에 8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3개 사업 모두 저희들이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과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R&D 사업에 대해서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논의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 임명현 6쪽입니다.

연구성과혁신관 소관 20건인데 20건은 사실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경상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 2번 항목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관련 기술 개발에 3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장님, 일단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전기요금 상승분을 사실은 예산안에 반영을 못 해서 한 102억 정도를 전체 출연기관에 배정을 더 추가적으로 요청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실행 예산을 짜면서 상승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관 경상비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조치가 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연구장비들이 돌아감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경상비를 통해서 전력요금을 지원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해당 기관은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 1번 한국핵융합연구원, 3번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그다음에 6번 표준과학연구원 그다음에 11쪽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를 통해서, 이 4개 기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번 2번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로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로 30억 원을 증액하자라는 김장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확인해 본 결과 이 과제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억 증액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건의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부동의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최수진 위원 잠깐 하나 물어 볼게요.

○소위원장 정동영 예.

○최수진 위원 전기요금 체계가 저는 앞으로도 많이…… 수요가 컴퓨터나 클라우드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해마다 올리는 것보다 뭔가 제도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전기요금 체계가 학교나 이런 데는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연구원도 거기에 어떻게 편입을 해서 연구기관들의 전기요금 자체를 공공요금에서 분류체계를 바꿔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법안 발의를 이미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님, 그 부분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부대의견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협의를 산업부랑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산업부 입장에서는 교육용은 대학이라는 어떤 대상이 명확한데 사실은 산업용으로 연구기관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연구개발 목적의 전기 사용을 교육용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저희 출연연구기관 이외에도 수많은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그런 전력요금까지도 편입이 돼야 되는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한전의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좀 어렵겠다라는 게 산업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그래서……

○최수진 위원 그 호주머니가 사실은 거기서 거기지요, 정부 돈 주나.

하여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위원님 입법 발의하시면 당연히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충권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좀……

5쪽의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소관 세 가지 건 다 수용인가요, 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창윤 일단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추경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또 있으실 것 같아서 감안하셔서 심사를 해 주십사 건의 말씀 드렸습니다.

○박충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1차관 심사 관련해서 의견 다 개진하셨지요?

2차관으로 넘어갈까요?

○이해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6페이지에 있었던 정부 쪽에서 ‘이것은 본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되고 넘어가고 있는 건지 확인을 조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전문위원 임명현 공공요금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부딪힌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필요한, 과기부에서 네 군데 연구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민 위원 아니, 딱 짚어서, 예를 들어 6페이지 연번 2번에서 아까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전문위원 임명현 1번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연구운영비 10억 6900 증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4억 9800 증액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표준과학연구원 관련해서 7억 100만 원 증액이고, 그다음에 죽 넘어가셔서 11쪽 에특사업입니다.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14억 8900 증액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게 결론을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차관 쪽은 지금 정리가 다 된 것으로 파악을 하신 거지요?

○전문위원 임명현 예.

○소위원장 정동영 2차관 소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2차관 소관입니다.

항목을 하나씩 말씀드리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실·국 소관별로 다 한꺼번에 할

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보통신정책관 소관입니다.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이해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안에 57억이 있는데 수정안이 67억 5700만 원 있다는 얘기는 이번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인 겁니다. 이것을 10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이고요.

APEC 기간에 AI 경진대회 이런 걸 개최해서 유망 AI스타트업 발굴해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1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김우영 위원 등이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2쪽 보시겠습니다.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입니다. 이게 2차 추경안을 보시면 30억이 있는데 수정안에 원안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추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대규모 인터넷 장애 예방을 위해서 라우팅 보안 강화, 라우팅 인증체계 도입 및 중요 DNS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 현재 추경안의 원안을 유지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우영 위원, 정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번 정보화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 사업은 2회 추경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최형두 위원께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해서 대통령직속기관이나 중앙부처 공공웹사이트 첨부파일이나 음성지원 및 다국어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해서 40억 2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3쪽 보시겠습니다.

부대의견 관련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예산의 신속한 복원·증액 필요하다는 이훈기 위원님 부대의견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 수행 시에 사업자의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해민 위원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 재검토 및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 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2차관입니다.

1번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사업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APEC 정상회의의 여러 가지 부대 행사들 중에 이런 부분이 지원된다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액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은 정부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정보화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 사업은 총 40억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소위에서 저희들이 논의했던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행안부 소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우선 적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소위를 통과했던 내용입니다. 그때와 같이 일부 수용해서 19.8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배움터 예산의 신속한 복원 및 증액에 대해서는 이훈기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용자의 급감 문제가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주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예산의 신속한 복원보다는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더욱더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3번에 이준석 위원님께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을 실질적 수요에 맞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추경 사업은 사실은 기존 디지털배움터의 계속적인 연장선보다는 AI 교육의 확산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도 편성을 하고 기존의 디지털배움터도 그쪽 방향으로, AI 교육으로 집중화해서 변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디지털배움터가 실질적 수요에 맞는지 재검토하고 AI 교육콘텐츠에 대한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계획을 수립하라고 문구를 일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의견 특별히 없으시면 다음 넘어갑시다.

○이해민 위원 있어요.

○소위원장 정동영 말씀하세요.

○이해민 위원 먼저 첫 번째,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은 스타트업 후속 지원까지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부대의견도 냈는데요. 자료 주시고 해서 파악은 다 했는데 적용 과정에서 통신사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도입을 했을 때 갑자기 대규모 망 장애 발생할 우려 또한 저는 존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통신사들과의 협의 진행을 꼼꼼하게 할 것, 그들이 반응이 미온적이라면 사실 도입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지만 대규모 망 장애가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경우에 정부 책임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돼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꼭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 디지털배움터 관련해서 ‘예산을 신속히 복원하고’ 제가 이렇게 부대의견을 냈는데 지금 대책 마련, 증액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관님이.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은 실제로 디지털배움터를 현재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져가고 확대할 거냐 아니면 AI 교육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변환할 거냐 그런 내용으로 일단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체적인 전환 방향하고는 조금,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 자체로도 저희들 수용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AI 교육의 확대라는 의미에서 복원이라는 말보다는 대책 마련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이훈기 위원 여기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디지털배움터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련

된 예산이잖아요, 지역 구석구석에 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런데 이게 대폭 감액이 됐었잖아요, 한번.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복원 얘기를 쓴 거예요. 쓴 거고 관심을 갖고…… 이게 국민들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제가 복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얼마 전에 워낙 많이 감액이 되어 갖고,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김현 위원 증액이라고 했나요?

○이훈기 위원 대책 마련,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과거 수준의 복원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증액보다는 대폭적인 원상회복이나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님이 주셨던 이 부대의견에 반대하거나 뭐 그런 뜻이 아니라 AI 전환이라는 부분으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대로 하셔도……

○소위원장 정동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4쪽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관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300억이 있습니다. 수정안에 또 그대로 300억이 있다는 얘기는 원안을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공부문에 AI 선도적으로 접목해서 공공서비스 혁신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번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닥터앤서 3.0)입니다. 2회 추경안에 보시면 100억인데 이것도 원안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추경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AI 혁신펀드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안에 보시면 포함돼 있습니다.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민간의 적극 투자를 유도하고 대한민국 대표 AI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인데 원안을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4번은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인데 2회 추경안에 보시면 500억인데 수정안에 100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2회 추경안 500억이 제1회 추경안 500억하고 똑같았다는 내용은 2회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역사업의 WBL 프로젝트 데이터 지원 사업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모델 확보를 위해서 데이터를 공동구매하거나 가공·활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5번입니다. AI 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2회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2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해서 데이터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김우영 위원이나 정동영 위원께서 20억을 확대하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다음 6번입니다.

컴퓨팅자원집중형 인공지능응용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추경에서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10억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고성능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 등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자원을 집적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쪽입니다.

AI 합성 의료데이터 생산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또한 8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2회 추경안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AI 합성 의료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강원도로 보입니다. 강원도 AI 의료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해서 8억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8쪽 부대의견을 보시겠습니다.

닥터앤서 3.0 사업의 디지털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고령층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자는 이훈기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AI 혁신펀드 사업 차별화 전략 마련, 그다음에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등에 관련해서 이훈기 위원과 김장겸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9쪽입니다.

AI 혁신펀드 사업 구체화 필요, 이해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구체화 관련해서도 이해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펀드 사업 설계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정부 주도 자펀드 결성이 조금 비효율적인 투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니까 국비 손실 등에 관해서 사후관리 장치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계해 보라는 이준석 위원의 부대의견 안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번 공공AX 프로젝트는 원안을 유지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도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심의 요청드리겠습니다.

2번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사업도 정부 원안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도 정부 원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번 AI 혁신펀드에 정부 원안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는 100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특이사항이 기금에 있던 사업을 새롭게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 원안인 1000억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World Best LLM 사업에 100억 원의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데이터의 필요성이 있기 100억 원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의회 나가겠습니다.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14개 사업의 데이터 안심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20억의 예산이 필

요한 사항이고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저희가 소위에 말씀을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번 컴퓨팅지원집중형 인공지능응용기술 개발에 일부 사업의 증액 부분입니다. 10억의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번 AI 합성 의료데이터 생산기지 산업육성 사업 중에 8억의 증액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8억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죽 나가는 계속사업들의 연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체적인 세부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용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대의견에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니까 7페이지 불수용이다 이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7페이지 1번에 8억 증액입니다.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는 올해 하고 그다음에 300억 그리고 국비 240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민 위원님.

○이해민 위원 연번 1번 같은 경우는 원안 유지 저도 공감을 하는데 자료 보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서 드립니다.

공공AX 프로젝트에서 성과지표가 됩니까? 필로 평가를 나중에 하게 되는 거지요? 공공AX 만족도라고 들었는데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 성열범 AI디지털인재양성팀 성열범입니다.

부처 수요에 따라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그쪽에서 실증하는 데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한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평가가 되고요. 나중에 솔루션 최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수요자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 성열범 예를 들어 산림청에서 어떤 솔루션 개발을 원한다 했다, 보상을 판단해 주는 AI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을 산림청에 적용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효과성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해민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수요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 성열범 수요 부처.

○이해민 위원 수요 부처, 오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인재양성팀장 성열범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민 위원 이것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공AX 프로젝트의 수요자는 부처도 되지만 그 부처를 통해서 사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인 가장 마지막 수요자로 가장 넓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입률 그다음에 지속 활용률

그다음에 업무 효율 개선 정도 여기까지 합쳐해 주시고 그것은 부처 안의 지표가 될 것이고 가장 마지막 수요자인 국민 체감효과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같이 넣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연번 3번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감액 요청을 드리려다가 원안 유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펀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을 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반쪽짜리 펀드가 되지 않으려면 사실은 투자 실적 그다음에 회수 전략, 석세스 메트릭스(success metrics),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때 성공 지표, 성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 우선 자료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구체적인 플랜을 좀 가져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으로 원안 유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연번 5번 같은 경우는 14개가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가 그렇게 중하나 그렇게 시급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은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본예산 반영을.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렇게 급한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어젯밤에 갑자기 올라온 과기정통부에서 본예산 준비하던 것을 추경으로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시급성이 느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의 개인 의견은 이 부분은 사실 증액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올라온 것이지만 살펴보고 나서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리해 주세요.

○최수진 위원 최수진입니다.

7페이지에서 AI 합성 의료데이터 기반 관련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말고…… 지금 의료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고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병원 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GPU가 모자라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작업이나 저장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못 담았지만 예산을 좀 해서 지역이 아니라 큰 프로젝트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플랜을 잘 짜서 예산에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과기부에서 주도적으로 가서 의료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데이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말씀 다 주셨으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10쪽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정책관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498억인데요. 이게 제2회 추경안에 없다는 얘기는 현재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새롭게 제기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은 어저께 정동영 위원과 최형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지컬AI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소관 또 기획재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상 이해 부족 등에 관해서 소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498억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도 2회 추경안과 1회 추경안이 같다는 얘기는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2번입니다. 지역 디지털기초체력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3억을 새롭게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12쪽 부대의견 보시겠습니다. 지역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성과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해민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퍼지컬AI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방금 말씀드린 10쪽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부대의견으로도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3번 지역디지털인재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게 과연 추경으로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이준석 위원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맞춤형 프로그램의 사후관리 계획을 잘 수립하라는 부대의견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번 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은 지난번 소위에서도 제기되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사업은 7억 증액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본예산으로 반영돼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맞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디지털기초체력 지원 사업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APEC정상회의의 여러 가지 부대사업 중의 하나로서 현재 8개국 정도의 APEC 참여 국가, 국내기업들을 매칭해서 네트워킹하는 사업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포함이나 지역에서 요구했던 거대 모형을 만드는 부분으로 소위에서 이야기를 했던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3억 정도 증액을 해서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에는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번 퍼지컬AI 핵심기술 개념 실증, PoC가 뭐예요? 프루프 오브 컨셉트(Proof of Concept)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원장 정동영 이것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이 기술개발 전망이 불투명하니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하자, 7개 지방자치단체에 70억씩 나누어 주자 이렇게 기재부가 중기부로 주면서 정리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기에 기재부가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게 맞아요? 그렇게 70억씩 7개 쪼개 나누어 주면 퍼지컬AI가 개발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제가 기술 분야에 대해서 과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소위 부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해 주는 게 저는 더 적절한 판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전문위원의 판단은 그렇고 강도현 차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지금 중기부에 신규로 반영된 500억의 성격과 내용은 사실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AX로 지원해 줘라 이런 예산의 주목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소위에서 넘어가서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사업은 핵심적인 데이터를 캐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퍼지컬 LLM을 만들면서 지역마다 좀 특색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장기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을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AI가 움직이는 공장을 만들자는 게 퍼지컬AI일 텐데 엔비디아가 만든 소프트웨어 코스모스나 옴니버스 그 수준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미국 엔비디아 것을 갖다가 AI 공장 금방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 생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장마다 특성이 있고 제조공정과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방식과 내용은 사실은 바로 커스터마이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볼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면 이것을 확산하고 보급하고 인재 양성도 하고 죽 장기적인 대규모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런데 이것을 70억씩 7개 단년도 사업으로 찢어 주자는 것은, 대한민국 AI 예산의 컨트롤타워가 기재부인데 그 담당 국장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은 정부입니다만 강 차관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일단 중기부의 500억 사업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관 부서의 가지고 있는 역할과 거기에 대한 대상들이 분류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자체에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쪽에 있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는 생각과 내용이 다른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궁금한 것은 젠슨 황이 어제 얘기했지만 미래는 퍼지컬AI에 달렸다 이래서 우리가 퍼지컬AI 기술개발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겠다고 했는데 기재부는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겁니까? 안 받아들이는 핵심 논리는 뭐예요? 중기부 사업 말고, 이것을 전혀 엑셉트 안 한 거잖아요. 이해 부족이에요, 아니면 설득 부족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첫째는 제가 설득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범용적인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이러한 퍼지컬 LLM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규모 사업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던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그 지역마다 전문성을 전문가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또한 퍼지컬AI에 대한 전체적인 R&D 계획들도 소통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오케이. 그러면 기재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퍼지컬AI 관련해서 각 지역의 민간기업들이 알아서 퍼지컬AI LLM을 만들고 기술개발을 하

라 그런 입장이예요? 기재부의 국가전략은 뭐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소위원장 정동영 관망해 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심층 있게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소위원장 정동영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1년만 빨랐어도, 2년만 빨랐어도 AI 판도는 달라졌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물론 과기부는 열심히 했지만 국가 역량을 여기에 총 집중하는 데는 실패한 거라는 말이지요, 캐나다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이 했던 것에 비하면.

국회 과방위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비로소 GPU도 추정 예산에 1조 4000억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부가 선도했어야지 그런 점에서 GPU를 그 모양으로 처리해 놓고…… 과기부가 소요 제기했겠지만 기재부가 안 들었을 것 아니예요?

피지컬AI도 마찬가지로예요. 그러니까 기재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지컬AI를 과기부가 상의했는데 없애 버리고 중기부 500억으로 둔갑시켰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기재부의 피지컬AI 국가전략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피지컬AI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장기계획들을 만드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또한 세밀히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자라는 게 아마 기재부의 입장인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은 소위를 거치면서, 지난 본 회의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반응을 해 가고 들어가자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과방위에서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도 기재부가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과기부가 돌파해 줘야지 또 위원들한테 넘기면 과기부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예요. 대한민국 피지컬AI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과기부가 어떻게든지 기재부를 설득하고 끌고 가야지, 기재부가 예결위에서 반드시 예산안 마지막에 반대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 강 차관이 책임지고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아마 정부로서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 더구나 몇 백억씩 되는 예산을 툭툭 올리기가 힘드니까 그 비슷한 사업이네, 비슷한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돈을 얹어 주지 하고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동영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개념 부족이지요, 개념 부족.

AI가 뭔지 사실은,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2016년에 이세돌, 알파고 붙었을 때 그때 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했으면 아마 상당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부로서는 재정건축과 맞추어야 되는 측면 등등 해서 아직 개념화 단계인 PoC 단계다 보니까,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너무 타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보니까 차관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AI 그러면 AI 3대 전략 핵심 요소, 구성 요소가, 3대 필라(pillar)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AI 컴퓨팅 인프라, 우리가 GPU 구하려고 했고 또 에너지도 필요하겠지만, 두

번째는 데이터, 세 번째는 인재였지요. 이게 데이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 버린 AI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어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굉장히 독자적인 가치로 HBM도 있고 하지만 글로벌을 주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느냐? 데이터가 있는 제조 분야다, 그런데 제조 데이터 이래 놓으니까 ‘제조 그건 산업부잖아’ 제조를 산업부에 끼워 넣기 그러니까 ‘맞아, 중기부에도 비슷한 게 있지’ 이렇게 간 거예요, 내가 짐작컨대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기초 데이터기 때문에 AI를 훈련시키고 AI를 만들기 위한 피지컬 AI와 LAM을 만들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서비스, 이번에 아마존하고 우리 SK가 만들었지만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그 데이터는 미국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그런 큰 제조공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있는 곳이 중국하고 우리인데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지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중국한테 서비스 산업만 파는 나라가, 사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중국 저장성입니다. 이것을 좀 연구해 보십시오.

이게 한국경제 신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났습니다. 지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도 여기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반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저장성이 우리나라 같으면 제조벨트가 있는 이런 곳인데 제조데이터 순환구조의 테스트베드로 낙점하고 여기에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경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저장성이 하고 있는 게…… 저장성 정부는 올해를 글로벌 제조데이터 허브 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2025년부터 3개년간 AI발전 행동계획, 그다음에 415X 선진제조업 클러스터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는데 과학, 제조, 소비, 교통, 전 산업의 AI 융합을 꾀하겠다는 데이터 굴기지요, 데이터 굴기.

우리도 데이터에서는 최첨단의 데이터가 많다 이거지요. 지금 이미 우리 제조벨트에 가보면 로봇을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이 로봇에 센서, 사물인터넷이 설치돼 있어서 온도·진도·습도·압력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요. 이런 게 엄청난 데이터가 양산됩니다. 이걸 가지고 제조 AI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LLM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즈 이런 걸로 막 훈련시켰다고 하듯이 양질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만 마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장성에 보면 중국 자동차 제조사 가운데 지금 판매 순위 10위에 진입한 지리자동차 여기에 보면 한 공장에서 800대의 로봇과 고해상도 카메라, 라이다(LIDAR), 온도·진동·모터 센서를 통해서 하루에 매일 30TB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가 가공할 것이냐? 이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기들 최고의 제조 AI 모델을 만들겠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응용이지요, 중기벤처부라든가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조 AI의 버티컬이라든가 특정 응용, 주로 그걸 지멘스가 쓰거나 이런 데 대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공장에서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이 제조 분야에서 AI로 세계를 주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기술은 세계 최고인데, 제조데이터도 무한정 산업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산업현장이고 제조다 이렇게 되니까 혼선이 있어요. 혼선이 있는데 우리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소관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개념을 정립을 해야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 정도면 기재부 설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중국 저장성 케이스, 이미 중국이 앞서가고 있구먼요, 우리는 선도 사업 지정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돌파를 우리 강 차관이 책임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민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썼는데, 우선 예결위에서 기재부 논리를 넘어서는 논리를 과기정통부에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포인트로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산업 발전을 하려면 어차피 단기 과제하고 장기 과제가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가 조치를 내린 것은 꽤나 단기 과제 쪽에 가깝습니다. 단기 처방 쪽에 가깝고, 과기정통부에서 가져가야 될 것은 결국에는 조금 전에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원천기술 확보 부분 쪽에 더 가깝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 쪽에서 그러면 원천기술 만들 때까지 우리나라 산업 다 올스톱시키고 있을 거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거는 단기 처방이고 장기 처방 또한 필요하고, 거기에서의 키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제조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원천기술 쪽이다 이런 논리를 피력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재부는 분명히 이것을 똑같이 놓고 ‘중복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스토리를 만드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원장님, 부대의견 12페이지에 하나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이 추정안의 시급성, 불가피성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검토라는 것은 사실은 다시 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를 ‘검토하여’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 추정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13쪽입니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2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226억 2회 추정안인데 수정안이 250억을 더 증액하자는 박민규 위원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80억을 증액하자는 황정아 위원 안 등이 있었습니다.

14쪽입니다.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2회 추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983억 있는데요 각각 황정아 위원은 840억 또는

60억을 증액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우영 위원과 정동영 위원은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번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AI 새로 발굴하는 데 증액을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54억이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해외 바이어나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1차 추경안 반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증액 의견입니다.

2번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황정아 위원님께서 842억 원의 증액을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안에서 2차 추경에 일단 300억 추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842억 증액을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 보니 정부안 300억에 80억 정도의 추가 증액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정아 위원님 주셨던 의견 842억 중에 정부 증액분 플러스 80억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내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60억 증액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 60억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말씀 들을까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다음은 뭐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다음 자료 15쪽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안에 262억 3000만 원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24억 7000만 원을 더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희 위원,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정보 유출 가능성 검토 또는 사업의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김장겸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민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재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사업 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반하지 않는지 유권해석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7쪽입니다.

사생활 보호 등 민생 예산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자는 김장겸 위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1번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 사업에 24억 증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사업계획들이 쭉 잡혀 있고 거기에 공문을 통해서 지역에 지원이 됐지만 일부 감액들이 발생했던 부분이어서 그 감액 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좀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억 증액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이나 규모의 내용에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2번의 이해민 위원님 지적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AI 기반 침해대응을 할 때 데이터를 캐터링하고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들을 축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검토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 성실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대의견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이것 혹시 구체적인 대답을 하실 분이 여기 나와 계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담당 국장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민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번에 SKT 때문에라도 더 부각이 됐고 관련해서 침해 대응체계를 AI를 사용하여 더 고도화하겠다, 고도화하겠다라는 것의 키 중의 하나는 시간을 줄여서 굉장히 짧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평균 3개월 말씀하셨는데 그걸 획줄이겠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 결국에는 포렌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원인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저는 목표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줄이려면 결국에는 이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될 텐데 이 학습 데이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스24에서도 못 받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두가지가 존재를 하지요. 실제로 그쪽에서 데이터를 줄 것인가 그다음에 줬을 때 이게 망법에 반하지 않는가, 이 모든 게 데이터 부분에서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데이터에 민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예, 맞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원래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교착상태에 빠져 버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대의견을 냈고요. 이거는 분명 추진하기 전에 그 부분을 반드시 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속기록에 남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사실은 개인정보나 산업정보들 중의 일부도 민감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조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악성코드라든지 취약점이라든지 사실은 공개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법률 자문도 검토를 거치고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그것을 빼놓고 했을 때 제가 보면…… 그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관련된 헬프센터 집어넣어서 학습시킨 챗봇으로 끝나 버릴 수가 있어서 절대 그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견 추가로 듣고 의견이 없으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러면 제가 2차관 소관 것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AI 혁신펀드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제기해 주셨던 것을 문장을 좀 가다듬거나 포함시키거나 그런 과정은 거친 다음에 소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시면 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사업은 10억 원 증액입니다.

2쪽의 인터넷 경로 보안 고도화 사업도 원안 유지입니다. 정보화취약계층 정보접근성 강화 지원 사업은 40억 2600만 원 중에 19억 8000만 원 정도 증액하자는 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공AX도 추경안 원안 유지입니다. 의료AI혁신생태계 조성(닥터앤서)도 원안 유지입니다.

5쪽입니다.

AI 혁신펀드도 원안 유지입니다. 그다음에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정부 증액 100억입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AI혁신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도 20억입니다. 그다음에 컴퓨팅자원집중형 인공지능응용기술 개발 사업도 10억 증액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균특, 7쪽입니다.

AI 합성 의료데이터 생산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8쪽입니다.

8, 9쪽 부대의견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피지컬AI 핵심기술 PoC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98억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해서 갑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이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 사업은 3억 원 증액입니다.

12쪽 부대의견은 정리하겠습니다.

13쪽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사업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14쪽입니다.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은 위에 황정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AI반도체 상용화 지원 사업 842억 원 중에는 80억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아래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는 60억을 증액합니다.

15쪽입니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업에서는 24억 7000 증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13쪽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지원 24억, 아까 정부 쪽에서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수용 의견이었는데 빠졌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여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소위원장 정동영 밑의 54억이 신중한 검토고 위에는 감사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위에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왜 아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거기는 아까 뒤에 있는 842억 증액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래요? 24억은 반영 안 하는 거예요? 박민규 위원이 아주 강조를 했던 사업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다만 저희 의견은 시간이, 오랜 기간 소요가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집행 가능성이 없다?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나요? AI·디지털 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 사업 16억은 AI·디지털 전환 해외실증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현지 실증을 통해서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당장 예산 쓸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저희가 1차 추경에 54억이 반영돼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부 반영해 주시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일부 반영해 주시면 좋겠어요. 24억 중에 일부 반영이라는 얘기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다음에 12페이지 부대의견 두 번째 피지컬AI 관련해서 저하고 최형두 위원님이 다른 내용 아까 발언한 거 있잖아요, 기재부 설득하라는 거. 기재부가 AI 개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 차관 이거는 갖고 계신 거예요, 피지컬AI 1600페이지짜리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예, 저희들 다 검토해서 그중에 요약해서 그래서 249억 원……

○소위원장 정동영 이거 기재부 관리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중기부 500억 예산 온 거 보면 4페이지인가 5페이지 예산서 돼 있는데 전혀 준비 안 돼 있고 ‘그냥 70억씩 나눠 먹어라’ 그런 식으로 기재부가 일하는 거

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부대의견에 자세히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기부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 퍼지컬AI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했다는 것, 그다음에 국가 전략으로서 퍼지컬AI에 대한 앞으로의 장기 비전이 전혀 결여돼 있다는 것 그거를 통박을 하시고 그리고 예결위 처리 과정에서 확실하게 과기부의 논리를 관철할 것을 여기다 의지를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차관 소관 되셨고……

○**이해민 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6페이지 연번 5번에서 이게 이미 14개 운영 중이고……

저는 이게 추정 대상인가가 질문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데이터안심구역 간 연계를 좀 더 숙고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통상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시급성, 추경의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편성할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 판단에 관해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재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가급적이면 보충성의 원칙을 맞추는 게 추경에서는 좋긴 좋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강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강도현** 필요최소한의 예산으로 20억 증액이 아니고 일부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본예산으로 연계시켜서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제기해 주셨던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들도 그것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20억 중에서 한 15억 정도 정리해 주시고 또 본예산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을 반영하면 전체적인 스케줄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이해민 위원님 그렇게……

○**이해민 위원** 아까 그것처럼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협의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방통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아니, 1차관 것은 정리를 안 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차관 아까 정리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리했었어요?

○**전문위원 임명현**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정동영** 다 정리됐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의결하고 해야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취합해서 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또

확인을 받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의결은 언제……

○김현 위원 의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기다려 보지요.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정리한 뒤에……

○전문위원 임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인기초연구에 400억 증액이고요.

2쪽 HBM 설립 관련해서 4억 증액.

그다음에 3쪽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에서 72억 증액입니다.

5쪽 1·2·3번은 다 여기 나온 대로 30억, 63억, 8억 증액입니다.

그리고 6쪽의 공공기관 연구운영비 지원 관련해서는 1번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10억 6900 증액, 3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4억 9800 증액, 그리고 다음 페이지 6번 표준과학 연구원에 7억 1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1번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4억 8900 이렇게 해서 총 614억 나왔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다음이 방통위인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전 사무처장 어디 갔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사무처장도 퇴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며칠부로 퇴직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올 초에 퇴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올 초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정동영 그래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나요, 방통위가? 방통위 사무처장이 1월 달에 퇴직했나?

○김현 위원 퇴직하고 나서는 처음이지요.

○소위원장 정동영 퇴직하고 나서는 처음이에요?

○김현 위원 퇴직이 아니라 사표 내고 돈 벌러 갔지요.

○소위원장 정동영 다음으로 방통위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김영관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전담직무대리가 무슨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직무를 대행하는데 국장 보직은 안 가지고 처장 보직만 전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기획조정관 소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부서별 주요 기본경비의 증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10억 8700만 원의 운영지원과 기본경비가 있는데 2회 추경안도 10억

87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이번 추경안에 제안되지 않았던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정안이 13억 4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요. 이게 방통위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특히 이것을 2025년도 정부안과 같이 2억 5300만 원 증액시켜 달라는 내용인데요. 특정운영경비 1300만 원이라든가, 특히 직책수행 경비는 사실상 법정 직책수당인데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측면을 조금 복원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 500만 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도 보면 특히 임차료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관서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부서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복원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송정책국도 2400만 원 증액, 방송기반국도 2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김영관 처장 대행.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1번부터 5번까지 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2025년 정부안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이훈기 위원 방통위는 이게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왜 감액을 했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당시 이유는 2인 체제로 계속 정책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페널티 차원에서 그렇게 감액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 그 부분하고, 방통위가 원래 설립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 의문을 제기하고, 방통위가 오히려 권력의 하수인처럼 역할을 해 가지고 감액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슬쩍 다시 또 증액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통위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다만 기본경비는 정말 기본적으로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국내여비 같은 부분도 직원들이 국내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쓰는 비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훈기 위원 그때도 감액하면서 일부는 다시 살려 줬어요. 그래서 최소로 감액을 한 거고.

그리고 방통위가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엄청 지적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 업무보고도 다시 하고 그랬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이훈기 위원 방통위는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위원회예요. 이것 자격 없어요, 증액

요구할.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 최형두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현원이 몇 명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정원이 283명입니다.

○최형두 위원 아니, 방송통신위원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입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명인데요.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고 병가 중에 있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이 경비가 방송통신위원 각각 5명에 대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다 책정된 겁니까? 지금 현원과 결원에 대한 이 차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산을 짤 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 다섯 분이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은 주로……

○최형두 위원 상임위원 관계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물론 상임위원님들 관련된 예산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과 관련된 예산도 많습니다.

○최형두 위원 지금 상임위원들은 2명인가밖에 없어서 3명분을 다 감액했지요, 그때? 그리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를 들면 상임위원……

○최형두 위원 상임위원들 급여 같은 건 여기 방통위 예산과 관계 없나요?

○김현 위원 방통위 예산이지요.

○최형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현 위원 그때 안 깎았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감액이 없었고요. 기타운영경비라고 해서 비서실 운영경비라든지 직책수행경비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이 있었습니다.

○최형두 위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도 다시 5인 체제로 정상화돼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정확하게 어떻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하려고 하는지 안을 나중에 좀 더 들어 봐야겠지만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

○김현 위원 지금 문제는…… 혹시 이 안이 언제 들어온 거예요?

○최형두 위원 김현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김현 위원 방통위 추경예산안 조정 내역이 언제 국회에 제출됐어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어저께 서면질의 형태로 추경 심사……

○김현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된 거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기재부 예산이 들어온 게 며칠이예요, 기재부에서 안이 만들어진 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국회로 제출된 게 23일……

○김현 위원 아니, 그 전에 6월 달에 기재부에서 추경예산안을 만든 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5월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6월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요, 정확하게?

그때 없었던 거잖아요. 아니,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안들은, 1차관·2차관 이걸 다 있었는데 방통위 안은 그 안에 없었던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추경안 자체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김현 위원 없었던 거지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어저께 들어온 거라는 거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형태로 위원회에……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형두 위원하고 박충권 위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전에 전혀 정동영 소위원장님한테……

소위원장님은 의원실에 언제 온 거예요? 이것 다 같은 시간대로 온 건가요, 어저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아까……

○김현 위원 잠깐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추경을 편성해서 논의를 하는데 예결소위에서 논의하는 날짜가 공지된 것도 그저께 거든요, 어제가 아니고. 그런데 어저께 정부에서 위원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저희는 하나도 몰랐어요. 지금 이훈기 위원도 모르고 이해민 위원도 모르고 아마 정동영 소위원장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게 제출이 돼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아까 1차관 소관 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 위원 아니, 그것은 정부 원안에 대한 보완 개념인 거고 이것은 원안 자체가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예가 있냐고요, 일단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런데 소관기관의 예산에 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께서는 사실 상당히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위원 그래도 여야가 있는데, 소위 위원들이 있는데……

○최형두 위원 그래서 해당 위원인 제가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모르겠어 가지고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것은 재정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최형두 위원 그럼요.

○김현 위원 그러면 오늘 논의하는 것은 저희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다수가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중단될 수 있는 거네요? 의견을 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25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방통위와 관련된 이 예산을 전면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정상화될 것을 예상하고 하는 거라는데 이 예산만 딱 올라와서 오늘 논의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해서 올라온 것 같단 말이지요.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를 얘기하는데 국정기획위원회를 떠나서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체로 가야 된다,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을, 그러니까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KBS 문제, TBS 문제 그다음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연결되어 있는 방통위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 직무유기·직권남용 문제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에 의한 2인 구조에서 불법행위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과다 지출로 인한 편법 사용 문제 등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늘린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희가 1년 넘게 지적해 오던 문제들이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논의가 이 자리에서 진행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당시에 이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다수당의 의견으로만 관철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최소한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김영관 처장직무대리님, 지금 이로 인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컨대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내지를 못 해서 큰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구체적인 예를 몇 개 제시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위기상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최형두 위원 봅시다. 법정 직책수당이 아까 기타운영비에 포함돼 있다 그랬습니까?

법정 직책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지금 직책수행경비에 대해서……

○최형두 위원 그런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방통위가 여러 더불어민주당 위원들, 당시 야당에게 지적받은 사항과 무관하게 실제로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정상적 업무 또 직원들에 대한 정상적 급여 또 시설·장비 유지 등에 심각한 차질이 있다는 사실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예를 들면 직원들이 원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택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업무택시와 관련된 경비가 삭감돼서 직원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되어서 사실은 원래 지출해야 되는 국내여비의 50%만 지금 지급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정동영 예,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보고를 퇴짜 맞았는데 그 뒤에 했나요, 아니면……

○김현 위원 어저께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어제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어제 보고했어요?

○김현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보고 내용도 사실은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출했는데 만약에 그것대로 된다면 방통위 고위공직자 다수는 다 검찰·경찰·감사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수행하고 추후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사무처장전담…… 직책도 복잡하네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냥 국장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김현 위원 사실은 지금 말씀에 국내경비가 5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의 일밖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정이 돼서 기획조정관과 관련된 비용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방통위 업무 지시는 매일 받으니까, 위원장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매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업무를 추진하거나 할 때 보고드리고……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지시받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것은 각 국별로 보고사항이 있을 때……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처장이……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지시를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장 지침, 지시는 처장한테 내리는 게 아니고 국·실장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내립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각 국별로 보고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소위원장 정동영 처장은 다 파악할 거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는 사전에 각 국별로 보고를 받고……

○소위원장 정동영 일주일에 몇 번 보고해요? 아니, 일주일에 몇 번 지시를 받냐고요, 각 국·실별로?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수시로……

○소위원장 정동영 평균.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수시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수시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최근에 위원장이 지시한 주요 업무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무슨 업무를 지시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장께서 지시하신다기보다는……

○소위원장 정동영 아니, 보고하고 지침 내렸을 것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정동영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보고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7월에 이제 단통법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단통법과 관련된 후속조치 그런 부분 보고드릴 적이 있고요.

○소위원장 정동영 그것 하나하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리고 최근에 쿠팡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된 조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소위원장 정동영 예, 됐고요. 그다음에 독임제 발언과 관련해서 연구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독임제와 관련해서 받은 것은 없고요.

○소위원장 정동영 내부에서 보고한 것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없습니다. 제가 지시를 받은 것은 대통령의 임기와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출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봐 달라 이런 지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래서 그것 보고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독임제 발언은 굉장히 중대 발언이에요. 그렇잖아요.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간 것인데 독임제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방통위원장이 떠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의 소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왜냐하면 방통위의 존립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심지어 국무회의에까지 가서 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다음 상임위 때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할 때, 출석하기 전까지 독임제에 대한 발언의 소명서, 전후 맥락과 본인의 소신을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달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전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리고 예산 복원,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지금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만 방통위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독임제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하여튼 비정상 상황입니다.

또 부위원장은 사실상 지금 사의 표명했는데 수리권자는 누구예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대통령께서……

○소위원장 정동영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수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안 돼 있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소위원장 정동영 저는 방통위는 현재 비정상의 극치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지금 복

원하라고 한 최형두·박충권 위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최형두 위원**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방통위 5인 체제 구조는 지금 민주당에서 낸 개정법안을 보더라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요?

○**김현 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이에요.

○**최형두 위원** 자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통위원을 새롭게 추천하는 문제 또 대통령이 새로 지명하는 문제 남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탄핵 사건 때도 있었습니까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물음에 우리 국회가 충실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영관 직무대리나 여기 있는 방통위 공무원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은 결원 상태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국회에 와서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범정직책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방통위 공직자들이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당, 업무경비를 좀 복원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의원실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적어도 최소한의 일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랑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소위원장 정동영** 예, 말씀하십시오.

○**이해민 위원** 지금 사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알겠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조직이 그래도 굴러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일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있는 것 같고 그 순서는 지난 1년간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다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는가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예를 들면 리박스쿨 관련해서 방통위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간단한 자료조차도 위원장 결재받을 수 없다고 제출까지 9일 걸렸거든요. 지금 위원장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방통위의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이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부터 풀어야겠지요. 순서를 지켜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깁니다.

○**박충권 위원**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민 위원님 말씀에 어떤 다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방통위원장이 일을 못 하게 된 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장 개인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방통위 예산이 운영경비라든가 기본경비 같은 것들 30~50%가 삭감이 됐는데 이

런 일들로 인해서 정부기관으로서 어떤 국가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스크라는 측면보다는 실제로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 인건비성 예산이 지금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여비라든지 택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한테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저도 관련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박충권 위원** 사비 써야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직책수행경비라고 해서 사실은 월급성 경비가 있는데 국장급 이상은 다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충권 위원** 어쨌든 여당 위원님들하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님 이렇게 해서 다 반대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민 위원** 잠깐, 저의 말에 존경하는 박충권 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같이 상임위 하면서 봐 오고……

저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문제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 정의가 돼야지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지금 문제 해결, 그 문제 정의는 얻다가 다른 데다 두고 지금 직원들 고생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법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의한 문제는 지금 방통위는 위원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조직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가 저의 문제 정의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오늘 하루 제가 이걸 보고서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예, 알겠습니다.

○**김현 위원** 김현입니다.

지금 정부 원안이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부가 정부안을, 이번에 의견을 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위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나 불수용하나 이런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김현 위원** 방통위가 낸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지금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안을……

○**김현 위원** 위원들이 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시는 겁니다.

○**김현 위원** 냈는데 그러면 방통위의 의견이 이걸 수용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누구랑 이 문제가 의논이 돼야 됩니까, 국회로 왔을 때? 그런 의견을 누구에게 청취해야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이나 예를 들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한테도 이런 야당 위원들의 의견이 있는데 우리의 의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 위원** 그런데 없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론 이런 일이 또 없겠지만……

그러니까 2025년도 편성된 안이 지난번에 전액 삭감이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용할 때는 사전에 소위원장이나 여당 간사에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라고 조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조율 내지는 의견이 알려져야 되는 거지요, 아무리 다급하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김현 위원** 그런 절차가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인식의 한계,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잘못되어서 지적됐던 많은 과제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어제의 보고가 실질적으로 패이퍼상으로 보고이지 실제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권 여당과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인 거고요. 국회는 국회인 거예요.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회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와의 협의 과정, 협력 관계가 전무한 상태로 예전 2025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방통위원회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거고 집권 여당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감안하지 않은 입장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저희가 여당 의원실에도 실무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어느 의원실에 설명하셨습니까?

위원장님실에 설명이 안 됐고요. 어느 의원실에 설명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시지요. 답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장 이우혁** 방통위 재정팀장 이우혁입니다.

실무적으로 정동영 위원장님실하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위원장실에 했고 나머지 위원들은요?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장 이우혁** 이훈기 위원님실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훈기 위원** 못 들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장 이우혁** 그리고 이해민 위원님실에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현 위원** 보좌진들한테요? 언제요?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장 이우혁** 어제 드렸습니다.

○**이해민 위원** 자료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위원님, 하여튼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 위원** 그러면 간사 방에는요? 간사위원실에는요? 자료만 받았다는데 자료가 설명입니까? 자료를 전달하는 게 설명이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재정팀장 이우혁** 제가 미흡했습니다.

○**김현 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설명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진행이에요. 이렇게 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 위원장 따로 그다음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 따로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방식이 따로예요.

그렇다면 그 논리라면 최형두·박충권 위원이 동의했으면 나머지 위원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자료를 전달했는데 수용하나 불수용하나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 처리하면 계속 일이 풀리는 게 아니라 일이……

○**소위원장 정동영** 충분히 입장이 다 개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최형두 위원** 저희가 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쨌거나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돼야 되고 그건 대통령이 지명할 몫이 또 있을 테고 국회가 추천할 3명이 있을 겁니다. 빨리 복원을 해서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되고 이걸 방통위원장이라든가 지금 상임위원들과 관련 없이 방통위가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급여를 제대로 다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직책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김현 위원** 직책수당이 월 얼마인데요?

○**소위원장 정동영** 입장을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정리하지요.

○**김현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합니까, 간사님?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거의 다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입장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의결하지요.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관련해서 이 또한 2회 추경안에 들어 있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인데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 특히 이용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 700만 원 증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최형두 위원, 박충권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입니다.

4쪽입니다.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을 보시면 이것도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요.

불법스팸 사실조사나 민원상담 진행하고 스팸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기통신사업법을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전송자격인증제를 운영해야 됩니다, 9월부터.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내용인데 이것도 보시면 최민희 위원과 한민수 위원 포함해서 한꺼번에 문제 제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방통위 의견이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1번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체계로는 AI 서비스로 인해 새로이 대두되는 유형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액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별도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시고 의결할까요?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걸 제가 정리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직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안 내려 주신 건데요. 기본경비를 반영해 주실……

○김현 위원 아니고요. 이용자……

○소위원장 정동영 내가 아까 위원님들 의견이 다 나온 것 같다고 얘기한 건……

○김현 위원 그건 1, 2페이지는 아니고요. 이용자정책국 관련인데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저희가 지난번에 증했는데 잘린 예산이지요? 이게 그 예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거……

○최형두 위원 이용자 역량 강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현 위원 이것 지난번에 증했던 것 아니지요? 지난번에 원안에 있던 게 이번에 증된 거지요? 이번에 나온 거지요?

○최형두 위원 1회 추경 때도 추진이 되었고……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받아 주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김현 위원 3페이지가요?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

○김현 위원 4페이지는 이것도 원래 방통위가 안 받겠다는 걸 받으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받으세요 해 가지고 했던 안이 이거예요,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하라고 했던 게.

○이해민 위원 그래서 덧붙이자면 저는 연번 2번에 대해서는 추경 반영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번 1번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장에서 위원장께 과기정통부장관님 앉혀 놓고, 두 분 앉혀 놓고 한 세 번인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 과기정통부하고 업무 교통정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협의한 것을 들고 와야지 저는 여기에 합의를 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첫 번째 것은 반대하고요. 두 번째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은 증액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양해를 좀 하십시오.

정리하면 1, 2페이지는 다음번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의 스왑 그 부분만 반영해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방통위는 독임제 발언과 관련해서 상세한 소명서를 서면으로 위원들에게 제출해라, 두 번째 방통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방통위원장의 지시에 대한 보고서를—작성할 거 아니에요, 지시했으니까—그 보고서를 즉각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 두 가지를 부대의견으로 붙여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EBS 사장을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하고 임기가 같아야 된다면 어디까지가 대통령 임기하고 같아야 되는 건지, 시청자미디어재단, KOBACO 그다음에 EBS, KBS 이런 방송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까지도 포함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 부대의견 붙이면서 방통위의 조속한 5인 체제 복원과 또 이를 위해서 방통위 직원들의 급여 부분 등도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야당의 의견이 강력했다, 첨부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방통위부터 의결하겠습니다.

1, 2페이지는 없던 것이고 마지막 스왑 대응 예산 10억 5000만 원 반영하고 그리고 부대의견 추가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방통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합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위원장님, 잠깐 남은 시간에……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 2차관 소관에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사업에 20억 전부 동의인데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일정 부분 고려해 보라고 했던 내용 15억 증액으로, 6쪽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예,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그다음에 자료 13쪽에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융합서비스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관련해서 박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과기정통부랑 확인해 보니까 24억 중에 16억 정도를 증액하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우주항공청 하고 나서 과기부 의결하지요.

우주항공청 예산안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임명현** 소위 자료 1쪽입니다. 3건입니다.

1번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규로 58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2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관련해서 공공요금 부족분 6억 증액 요구가 있었고, 3번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운영비 관련해서 역시 공공요금 부족분 46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 사업 예산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총사업비하고 사업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서 신규 내역 반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기존 사업인 우주항공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신규 내역으로 옮겨서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24억 8500만 원 반영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안건과 3번 안건 운영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정동영 위원님들 의견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해도 됩니까?

○김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할 때 의견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우주항공청차장 노경원 예.

○최형두 위원 의결하면 됩니까?

○김현 위원 예.

○소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우주항공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기부 1차관·2차관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말씀드린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과기정통부 1차관·2차관, 우주항공청 차장, 방통위 사무처장대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직원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현 박충권 이정현 이훈기 정동영 최수진 최형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전문위원 임명현

입법심의관 정석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정택렬
연구성과혁신관 이은영
미래인재정책국장 홍순정
정보통신정책관직무대리 윤두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김경만
소프트웨어정책관 황규철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박태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최우혁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전담직무대리 김영관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방송기반국장전담직무대리 곽진희
우주항공청
차장 노경원
기획조정관 이재형
우주항공정책국장 권현준

합심회의의록